

국민이 체감하는 기본사회 대전환,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다

-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 강연 실시
- 부문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등 논의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4월 22일(수)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기본사회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여하는 ‘기본사회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워크숍’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워크숍은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이후 마련된 첫 관계부처 합동 워크숍으로, 업무 담당자의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,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과제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워크숍에서는 기본사회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과 기본사회 정책 추진방향이 논의되었다.

<전문가 특강을 통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기본사회 이해도 제고>

□ 먼저 「기본사회의 의미와 필요성, 우수사례」 등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.

○ 은민수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은 ▲ 기본사회의 의미와 특징 및 핵심 가치 ▲ 기본사회 국내 현황 분석 및 정책 추진 필요성 ▲ 기본사회 실현 우수 사례 및 과제 발굴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.

○ 뒤를 이어, 유재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은 ‘AI 기본사회 실현’을 주제로, ▲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 효율성 및 접근성 향상 ▲ 전 국민의 인공지능(AI) 기술 혜택 향유방안 등을 소개했다.

<‘국민이 체감하는 기본사회 실현’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 방안 등 논의>

- 행정안전부는 기본사회가 국민의 삶 속에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공유하고, 관계부처와 효과적인 기본사회 정책과제 추진방안을 모색했다.
 - 특히, 주거, 돌봄, 교육, 안전 등 기본사회 각 부문별 추진체계 마련과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.
 - 또한, 정책과제 추진 시 국민·주민참여, 사회연대경제, 인공지능(AI) 기술과의 연계 등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 방식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.
- 한편, 행정안전부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토대로 기본사회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사회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질적 성과창출에 앞장서나갈 방침이다.
-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“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‘기본사회 대전환’을 위한 관계 부처 담당자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, 기본사회 정책의 밑그림을 촘촘하게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히며,
 - “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-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“기본사회는 단순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국가적 과제”라고 강조하면서,
 - “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적 협력이 필수적이며, 각 부처 정책과 사업 전반에 기본사회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자치혁신실 기본사회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서기관	유지영 (044-205-3651) 한경모 (044-205-3657)
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	--

